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 검증 기사를 중심으로\*

이나연\*\*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가 세계 주요 팩트체크 기관이 공유하는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검증 준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를 분석하여 국내 팩트체크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의 팩트체크 기관인 서울대학교 팩트체크(SNU FactCheck)와 제휴하여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발언과 공약을 검증한 국내 주요 12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 174건을 내용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FCN의 5대 준칙을 토대로 투명성과 불편부당성을 주요 검증 원칙으로 도출하였다. 투명성은 투명 취재원 사용, 익명 취재원 사용 및 이유 공개, 수정내용의 공개 등 3개 항목으로, 불편부당성은 언론사별 판정 결과의 일치도, 발언 내용에 대한 찬반 주장을 모두 포함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이견(異見)의 수용 등 2개 항목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팩트체크 기사당 포함된 투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은 각각 평균 2.69개, 0.89개였다. 또한 팩트체크 초고를 수정한 기사는 124건(71.3%)이었으나 어떤 내용을 수정하였는지에 대해 밝힌 기사는 4건이었다. 불편부당성 중 판정결과 일치도의 경우 서로 다른 언론사에서 같은 발언을 검증한 55건의 기사 중 22건의 판정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였다. ‘이견의 수용’ 기사는 166건(95.4%)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이 연구는 팩트체크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기하는 ‘선택편향’과 ‘검증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았다. 선택편향이란 언론사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특정 후보만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이며, 미래예측, 인과관계, 정치적 수사 등을 팩트체크하는 것은 오류라는 주장이다. 그 결과 선택편향은 대체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증오류의 가능성’의 경우 미래예측, 인과관계, 정치적 수사의 내용이 각각 10.3%, 18.4%, 25.2%의 팩트체크 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 팩트체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팩트체크, 투명성, 불편부당성, 선택편향, 검증오류

---

\* 이 논문은 2018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이 연구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larosa@sungshin.ac.kr](mailto:larosa@sungshin.ac.kr)

## 1. 서론

2003년 3월 6일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라크와의 전쟁을 알렸다. 22분 동안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알카에다 혹은 9·11테러를 무려 14번이나 언급하며 이라크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시엔 이미 미국 정보부(CIA)가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계설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었지만, 회견에 참석한 기자 중 아무도 어떤 근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개입 정황을 확신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시의 발언을 충실하게 ‘받아쓰기’ 하였다(Cunningham, 2003).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며 커닝햄(Cunningham)은 많은 미국인이 지닌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중 하나가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계설이며, 이는 유력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하지 않은 채 보도한 언론의 탓이 크다고 비판하였다(2003).

위의 사례는 최근 10여년에 걸쳐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된 ‘팩트체크’(Fact-Check)가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Dobbs, 2012; Marietta, Barker, & Bowser, 2015). 일련의 학자들은 재정적자와 같은 경제 이슈, 그리고 이라크 전쟁의 원인과 같은 정치 이슈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혹은 부정확한 정보가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으며, 이러한 오보(誤報, 잘못된 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는 주류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언론이 정치인이나 정부의 거짓 혹은 부정확한 발언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이와 같은 저널리즘의 관행, 특히 유력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관행을 반성하고 비판하며 시작되었다. 미국의 언론은 1960년대 베트남전, 1970년대 워터게이트, 그리고 2000년대 이라크전 등에서 정부나 유력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였다가 이후 오보로 드러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태동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발언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참/거짓(truth/false)’으로 판정, 공개한다.

이러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2003년 부록스 잭슨 전 CNN 기자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 팩트체크닷오르그(FactCheck.org)를 설립한 뒤 크게 확산되었다. 주류 기자들의 취재, 보도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고 정치인 행동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며 수용자의 허위정보의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Gottfried, Hardy, Winneg, & Jamieson, 2013; Graves, Nyhan, & Reifler, 2015; Nyhan & Reifler, 2015; Pingree, Brossard, & McLeod, 2014; Shin & Thorson, 2016; Sullivan, 2012). 그러나 한편으로, 팩트체크에 동참하는 기관이 급증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팩트체크 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2016년 미국 포인터재단의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는 팩트체크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준칙(Code of Principle)을 제정하였으며, 2018년 현재 팩트체크를 주도한 미국의 3대 전문 팩트체크 기관을 비롯해 58개 기관이 IFCN의 준칙을 준수하는 기관으로 승인하였다(Poynter, 2018).

한국에서도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국내의 많은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도입하였다(최순욱·윤석민, 2017). 이 중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는 2017년 ‘서울대학교 팩트체크(SNU FactCheck)’를 설립하고 KBS SBS JTBC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15개 언론사와 제휴해 이들 언론사가 검증한 기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국내 팩트체크에 앞장서왔다. 시민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지는 주요 팩트체크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같은 사실에 대해 기관별로 어떤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팩트체크 기사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발표되었지만(김선호·백영민, 2018; 백영민·김선호, 2017; 염정윤·정세훈, 2018),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가 어떠한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팩트체크 기관이 준수하는

IFCN의 팩트체크 준칙(Code of Principles)을 검토한 뒤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가 이를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를 분석, 한국 팩트체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기존 저널리즘의 차이점, 그리고 팩트체크의 준칙이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에서 도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르로 부각되는 팩트체크의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국내 저널리즘 연구에 기여하고, 이제 도입 단계인 국내 팩트체크에도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이론적 논의

### 1) 팩트체크 저널리즘, 저널리즘, 객관주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전통 저널리즘의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기에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을 공유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특성도 지닌다(정은령, 2017).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검증 과정은 일반적으로 ‘검증대상의 선정’, ‘조사(research)’, ‘검증 사실의 기술 및 에디팅’, ‘판정(verdict)’ 등으로 이뤄진다. 전통 저널리즘의 기사작성 과정도 ‘취재 대상의 선정’, ‘취재 및 검증’, ‘취재 사실의 기술’ 등으로 ‘판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팩트체크와 동일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3대 전문 팩트체크 기관은 검증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저널리스트로서 판단한 뉴스가치” 혹은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한 뒤 ‘참/거짓’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전통 저널리즘과는 거리가 있다. 객관주의 원칙을 오랫동안 준수해온 전통 저널리즘은 취재 대상에서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중립성, 그리고 특정 편에 서지 않는 균형성을 중요하게 여겨왔다(Schudson, 2001).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한 뒤 ‘참’ 혹은 ‘거짓’으로 판정내리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의견을 제시하는 주관의 개입일 뿐 아니라 특정 편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주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Graves, 2016).

아울러, 정부나 유력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없이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저널리즘은 서로 다르게 접근한다. 저널리즘에서는 이들의 발언 자체를 ‘사실’로 간주하여 보도하지만, 검증 없는 인용 보도의 부작용에서 태동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이러한 관행을 배격한다(Graves, Nyhan, & Reifler, 2015). 팩트체크 저널리즘에서는 정치인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발언을 받아쓰는 것은 언론의 사명인 진실 추구자(truth seeker) 혹은 감시견(watchdog)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다(Amazeen, 2012). 이러한 차이에 주목해, 그레이브스와 동료들은 “팩트체크는 저널리즘의 제 4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는 저널리즘의 혁신”이라고 말하였다(2015, p. 3).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배격하는 “검증 없는 인용”은 주류 언론이 준수하는 객관주의 원칙에서 비롯된 관행이다.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저널리즘에서의 객관주의(objectivity) 원칙은 실증주의 과학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객관주의 원칙에 따라 저널리스트의 업무란 기자의 논평, 비판과 같은 기자의 가치나 견해를 배제한 사실만의 기록으로서의 뉴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Schudson, 2001). 객관주의 원칙은 또한 중립성(neutrality)과 균형성(balance)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기자들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특정 편에 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Chalaby 1996; Streckfuss 1990). 예를 들면, 기자들은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에서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인용 저널리즘”을 통해 중립과 균형을 지키고자 하였고, 기자들의 사실(fact) 전달은 독자들이 “최선의 진실”에 이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주의에 원칙에 따른 관행이 확산되면서 기자들은 사실 검증이 가능한 취재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편향되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위적

균형을 추구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Nyhan & Reifler, 2015). 기자들이 객관주의 원칙을 토대로 정립한 관행은 형식적 측면에 치우쳤으며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평가였다(Tuchman, 1972).

그러나,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검증없는 인용과 같은 저널리즘의 관행에 대해 “객관주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가짜 관행”이라고 반박하였다(Graves, 2016). 이들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취재 및 보도에서의 투명성, 특정 정파에 유리하지 않은 불편부당성, 그리고 무엇보다 근거에 입각한 검증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14)도 저널리즘에서 객관주의란 취재 과정에서의 투명성, 즉 독자들도 기자와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취재과정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면 다양한 연구자가 유사한 연구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다른 취재자도 최대한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전통 저널리즘의 차이점 중 하나는 객관주의를 수행하는 방식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코딩턴과 동료들(Coddington, Molyneux, & Lawrence, 2014)은 전통 저널리즘의 인용을 직업적 객관주의(professional objectivity), 팩트체크 기관의 검증을 과학적 객관주의(scientific objectivity)로 각각 정의하며, “전문 팩트체크 기관은 검증 과정에서의 투명성, 검증에서의 반복 가능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p. 4)고 평가하였다.

## 2) 팩트체크 기관과 IFCN이 제시한 사실검증의 주요 준칙

IFCN이 제시하는 팩트체크의 준칙도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IFCN는 팩트체크의 5개 준칙으로 1) 비정파성과 공정성(Non-partisanship and Fairness), 2) 취재원 투명성(Transparency of sources), 3) 재정과 조직에 관한 투명성(Transparency of Funding & Organization), 4) 검증방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Methodology), 그리고 5)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Open and Honest Corrections) 등을 제시하였다(2018).<sup>1)</sup> IFCN에 따르면 정파성과 공정성이란 팩트체크가 어느 한 편(정파)에 편중되지 않으며 동일한 검증 기준을 모든 팩트체크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재원 투명성에서는 취재원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한 모든 취재원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밝혀 독자들이 스스로도 팩트체크의 수행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정과 조직에 관한 투명성이란 재정 지원자가 누구인지를 밝힘으로써, 팩트체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검증 방법의 투명성이란 검증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는가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독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이란 판정 이후라도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IFCN이 제시하는 5대 원칙 중 4개는 투명성과 관련된다. 즉, 궁극적으로는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검증하는지를 밝혀 독자가 검증 과정에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독자가 동일한 검증과정을 거치더라도 같은 결과에 이를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도 IFCN의 준칙을 따르고 있어 사실 검증의 원칙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전문 팩트체크 기관의 공통된 검증원칙 중 첫 번째는 취재원(source) 사용에서의 투명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도를 전제’(on the record)로 취재하도록 한다. 또한 3대 팩트체크 기관은 공통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검증에 사용된 모든 원자료(Original document)를 기사 속에 링크하도록 권할 만큼 투명성을 강조한다.

취재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독자들은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알면, 기사의 토대가 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취재원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발언의 내용을 검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Tankard, 1976). 이에 학계에서는 물론 현업에서도 실명 취재원의 사용을 권장하고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다(Fedler, Bender, Davenport, & Drager, 2005; PEJ, 2005).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익명 취재원

1) <https://ifncodeofprinciples.poynter.org/>

사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취재원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해당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기사에도 왜 취재원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지에 대해 밝히도록 정하였다(박재영·이완수, 2007).<sup>2)</sup> 폴리티팩트는 “익명을 통해서만 진실을 폭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3대 전문 팩트체크 기관도 익명 취재원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팩트체크 기관의 투명성과 관련된 연구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한국 언론의 취재 관행을 다룬 선행연구는 팩트체크 기사가 아닌 일반 기사를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투명 취재원(혹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며 국내 언론의 투명 취재원 사용은 해외의 언론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김경모 외, 2018; 박재영, 2006; 이진호·정완규, 2009; 이재경, 2006). 이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 언론은 투명 취재원 사용을 전반적으로 적게 사용하고(박재영, 2006), 투명 취재원의 사용은 해외 언론에 크게 떨어지며(이진호·정완규, 2009; 이재경, 2006), 최근까지도 이러한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모 외, 2018).

IFCN의 검증 준칙과 한국에서의 투명성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에서 투명성의 원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을 제기하였다. 투명성은 취재원의 실명 사용, 익명 취재원의 사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지, 그리고 수정 내용을 공개하였는지 등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는 얼마나 투명하게 이뤄지는가?

**연구문제 1a.**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는 몇 명의 투명 취재원을 사용하는가?

**연구문제 1b.**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는 몇 명의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며, 익명 취재원 사용의 배경을 설명하는가?

**연구문제 1c.**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는 발표 이후 수정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는가?

IFCN가 제시한 5대 준칙 중 나머지 하나는 비정파성과 공정성이다.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도 공통적으로 불편부당성이야말로 자신들을 다른 정파적 블로거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한다.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크 고정란인 팩트체커(FactChecker)의 마이클 도브스(Michael Dobbs)는 “양쪽을 모두 비판하지 못할 때(즉, 특정 정당만을 비판한다면), 더 이상 팩트 체커가 아니다. 당신은 정치 캠페인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Amazeen, 2015a, p. 43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팩트체크 기사는 “민주당에 유리하며, 정파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Ostermeier, 2011). 예를 들어, 공화당원의 발언 중 거짓으로 판정받는 발언의 숫자가 민주당 의원 발언의 3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어메이진(Amazeen, 2015)은 이에 대해 실제로 공화당원이 더 많은 거짓발언을 하였다면 팩트체크 기관이 불편부당하더라도 이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오히려 검증이 불편부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같은 사안을 검증하였을 때, 검증 기관의 정파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실제로 2008년과 201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된 TV정치광고 중 2개 이상 전문 팩트체크 기관이 검증한 65개 광고에 사용된 150개 진술문(claims)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증 결과의 일치 비율은 95~100%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팩트체크 기관의 검증이 불편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2016).

국내에서도 언론사의 정파성이 논란이 되는 만큼 팩트체크의 불편부당성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방식을 토대로 두 개 이상의 언론사가 동일한 발언(혹은 사실)을 검증하였을 때(교차검증), 얼마나 일치된 판정 결과를 제시하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2) <https://www.nytc.com/a-note-from-dean-baquet-matt-purdy-and-phil-corbett-new-guidelines-on-anonymous-sourcing/>

**연구문제 2.**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는 불편부당한가?

**연구문제 2a.** 동일 검증 대상에 대한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는 언론사별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투명성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팩트체크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불편부당성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불편부당성 혹은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각도로 이뤄졌으며 이중 하나의 관점은 기사에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평가하는 것이다(목은영·이준웅, 2014; 손영준, 2011; 박성호, 2018; 박성호·윤석민, 2016; 이준웅·김경모, 2008). 즉, 논쟁적인 이슈를 검증할 때 한편의 주장만을 담는다면 이는 불편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 혹은 관점을 포함하는가와 서로 다른 견해, 즉 이견(異見)을 수용하는가는 불편부당성 혹은 공정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견의 수용’을 국내 팩트체크의 불편부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2b.**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 즉 이견을 수용하고 있는가?

### 3) 팩트체크를 향한 비판과 한계

한편,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검증 대상 선택에서의 편향과 검증과정의 오류(flawed) 가능성을 지적하였다(Marietta et al., 2015; Ostermeier, 2011; Uscinski & Butler, 2013). 선택의 편향이란 팩트체크 기관의 정치적 성향이 검증 대상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selection bias)을 의미한다(Ostermeier, 2011; Uscinski & Butler, 2013). 마리에타와 동료들(2015)에 따르면,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이 2012년1월부터 2013년12월까지 2년 동안 검증한 미국의 3대 논쟁적 이슈 - 기후변화, 인종차별, 재정적자 -에 대한 3대 팩트체크 기관의 검증 기사 숫자는 각각 1~15건, 0~16건, 11~53건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팩트체크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는 팩트체크 기관의 검증 대상(혹은 발언)을 선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도 어렵다고 공격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인 A는 100개의 발언 중 5개의 발언이 거짓이었는데, 팩트체크 기관이 거짓인 5개의 발언을 모두 검증하여 “거짓”으로 판정하고, 정치인 B는 100개의 발언 중 50개의 발언이 거짓이었는데, 팩트체크 기관이 거짓 발언 50개 중 5개를 검증하여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A와 B를 동일한 거짓말쟁이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증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과정이며, 특히 기자의 정파성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Uscinski & Butler, 2013). 이처럼, 팩트체크 기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검증대상의 선택 편향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에서도 검증대상을 선정할 때, 선택편향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3을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3.** 한국 언론이 팩트체크를 할 때,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검증 대상을 편향적으로 선택하는가?

두 번째 비판은 인식론적인 접근법에서의 ‘검증의 오류’의 가능성이다. 팩트체크 기관은 검증 대상이 주관적인 의견(opinion)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fact)과 사실에 근거한 주장(factual claims)이라고 주장한다. 즉, 팩트체크 기관이 검증하는 발언 혹은 진술문은 인과적 관계, 미래 예측, 그리고 정치적 수사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를 팩트체크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Uscinski & Butler, 2013).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 “경기회복법안(Recovery Act)의 덕분에 그렇지 않았다면 실업자였을 200만 명의 미국인이 고용되었다”고 발언하였을 때, 팩트체크 기관은 이를 검증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200만명이 고용되었다는 사실은 검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실업자였을’이라는 원인은 검증하기 어렵다고 공격한다.

아울러 정치인의 공약은 특정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발언이 많고, 팩트체크 기관은 이러한 발언을 주

로 전문가의 평가로 검증한다. 그러나 미래 예측은 전문가의 평가도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의미도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신스키와 버틀러(Uscinski & Butler, 2013)는 “1965년 미국 공화당하원세입위원회는 메디케어의 비용이 1990년에는 120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980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폴리티팩트는 ‘3200만명의 새로운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오바마의 정치 광고에 대해 비정파적인 단체의 추정을 근거로 ‘대체로 사실’로 판정하였지만, 1965년의 사례와 같이 이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예측일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p. 171).

이처럼 팩트체크가 지나는 한계를 지적하는 선행연구도 국내 팩트체크의 수행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가 이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문제 4.** 한국 언론이 수행한 팩트체크 중 검증의 오류를 포함한 기사는 얼마나 되는가?
- 연구문제 4a.** 한국 언론이 수행한 팩트체크 중 인과적 내용을 포함한 기사는 얼마나 되는가?
- 연구문제 4b.** 한국 언론이 수행한 팩트체크 중 미래예측 내용을 포함한 기사는 얼마나 되는가?
- 연구문제 4c.** 한국 언론이 수행한 팩트체크 중 정치적 수사를 포함한 기사는 얼마나 되는가?

###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가 IFCN이 제시한 준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 1) 내용분석 및 대상

국내 언론사가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본격 도입한 만큼, 이 연구는 19대 대선에서 한국 언론사들이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SNU 팩트체크’를 설립하고 15개 언론사와 제휴하여 언론사가 검증한 기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SNU 팩트체크에서 대선 기간 시민들에게 제공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SNU 팩트체크는 2017년3월29일부터 대선 전날인 5월8일까지 제휴 언론사 12곳으로부터 기사 174건을 공급받았으며 이를 모두 분석하였다.<sup>3)</sup> 한편, 언론사들이 검증한 사실(fact)은 모두 144건이며, 이러한 차이는 52건의 사실(fact)에 대해 2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여러 개의 검증 기사를 작성한 때문이다(교차검증). 예를 들면, 대선 기간 중 홍준표 후보자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고 발언하였으며, JTBC와 KBS에서 해당 발언을 팩트체크하여 각각 기사화하였다. 이 경우 사실(fact)은 1건이며, 팩트체크 기사는 2건이다. 한편, 분석에 포함된 기사는 SNU 팩트체크 홈페이지에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통해 수집하였다.

기사의 코딩 작업은 연구자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 박사과정 수료자가 담당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코딩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기사의 약 15.0%(20건)을 대상으로 각각 코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뢰도가 0.7 이하인 세 개 변인에 대해 다시 회의한 뒤 재코딩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크리펜도르프 알파(Krippendorff's Alpha)로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는 최저 0.78에서 최고 1로 나타났다.<sup>4)</sup>

3) SNU 팩트체크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15곳이나, 실제 팩트체크에 참여한 언론사는 12곳이다.

4) 주요 변인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실명 취재원의 숫자 1, 익명 취재원의 숫자 1,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 1, 수정여부 1, 수정 내용에 대한 설명 1, 판정결과의 일치도 1, 이건의 수용 0.88, 발언자 1, 진술문 내용의 주제 1, 인과관계 0.78, 미래예측 1, 정치적 수사 0.83, 발언의 속성 0.91, 발언의 출처 1, 팩트체크의 명시 1.

## 2) 주요변인 측정

### (1) 투명성

이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기관이 투명성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 취재원 사용(투명 취재원, 익명 취재원 사용, 그리고 익명 사용의 배경 설명)과 2) 수정 내용의 공개 등 2개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 ① 취재원 사용: 투명 취재원 사용, 익명 취재원 사용, 익명 취재원 사용 배경설명

선행연구에서 투명 취재원이란 기사에서 인용한 실명과 준실명 취재원으로 조작적 정의되었다(김경모 외, 2018; 박재영 2006). 실명이란 해당 취재원이 실명 소속 등이 드러나는 것이며 준실명은 신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소속이나 직책이 표시되어 해당 취재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인용을 의미한다(박재영·이원수, 2007; 김경모 외 2018). 반면, 익명 취재원은 ‘법원 관계자’ ‘여당의 고위 관계자’ 등으로 신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도 투명 취재원은 각 기사에 등장한 실명, 준실명 취재원 수로 측정하였다( $M = 2.69, SD = 1.92$ )이다.

또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에도 기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독자가 납득할 만한 익명 취재원 사용의 배경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다(Fedler et al., 2005). 즉, 왜 취재원의 실명을 밝힐 수 없는지와 익명 취재원이 해당 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의 숫자( $M = 0.89, SD = 1.14$ )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의 경우 그 배경을 설명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설명 있음 = 1, 설명 없음 = 0).

#### ② 수정 내용의 공개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은 IFCN의 팩트체크 준칙 중 하나이다. 수정내용의 공개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 수정에 대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가 최초 등록된 이후 재등록”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국내 언론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기사의 ‘최초 입력 시간’과 ‘수정 등록 시간’을 공개하며 수정 등록이 없는 기사는 수정되지 않은 것, 수정 등록이 있는 경우 팩트체크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뀐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사를 수정해 등록하였다더라도 재등록 시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수정한 시간이 몇 분 이내인 경우와 한 달 이후인 경우를 비교할 때 수정 내용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제 기사가 수정되었는지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정 여부는 ① 수정 없음, ② 24시간 이내 수정, ③ 24-48시간 이내 수정, ④ 48-1주일 이내 수정, ⑤ 1주일 초과-한 달 이내 수정, ⑥ 한 달 이후 수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혔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수정내용 공개 = 1, 수정내용 공개없음 = 0).

### (2) 불편부당성

선행연구를 토대로 팩트체크의 불편부당성을 1) 동일한 대상에 대한 팩트체크 판정결과의 일치도와 2) 이견(異見)의 수용 등 2개 항목으로 분석하였다(Amazeen, 2013, 2015a, b, 2016; Marietta et al., 2015). 이 가운데 판정결과의 일치도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팩트체크 기관의 불편부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언론사가 하나의 사실(fact)에 대해 검증한 ‘교차검증’에서 판정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같은 대상에 대한 언론사의 검증 결과가 체계적으로 불일치한다면 이는 불편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판정 결과의 일치 정도는 “완전 일치”, “대체로 일치”, 그리고 “완전 불일치”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정은령, 2017). “완전 일치”는 같은 대상을 검증한 언론사들의 판정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 경우이며, “완전 불일치”는 검증 대상에 대한 판정결과의 방



향이 완전히 다른 경우이다. “대체로 일치”란 같은 대상을 검증한 언론사들의 판정 결과가 한 단계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실”과 “대체로 사실”로 판정하였다면 “대체로 일치”로 분류하였다. 또한 판정결과가 “대체로 일치”하거나 “완전 불일치”인 경우, 판정의 방향이 언론사의 정파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보수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한 뒤 보수 언론사는 “사실”로, 진보 언론사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파적 편향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일치”인 경우에도 “절반의 사실”과 “대체로 사실이아님”처럼 판정의 방향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언론사의 정파성에 따른 판정결과의 차이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이뤄진 선행연구에서는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다양한 의견, 특히 상반되는 의견의 수용으로 측정해왔다(목은영·이준웅, 2014; 박성호,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도 공정성을 측정하는 한 방법으로 “이견(異見)의 수용”을 측정하였다. 팩트체크에서 이견의 수용은 “팩트체크를 하면서 서로 반대의견을 가진 견해를 모두 취재하여 반영하였는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기사가 사실을 검증하면서 해당 사실을 지지하는 취재원과 반박하는 취재원을 모두 포함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이견의 수용 = 1, 이견의 수용 없음 = 0).

### (3) 검증에서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과 검증오류

선행연구에서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은 검증 대상을 선택할 때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이 있는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수언론에서 진보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검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택 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1) 발언자를 기준으로 한 편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2) 진술문 내용에서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편향이 있었는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자가 “안철수 후보자는 사드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라고 발언하였다면 발언자는 홍준표 후보자, 진술문을 기준으로 하면 안철수 후보자이다.

이와 함께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정 결과에서 체계적 편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보수 언론사의 검증에서는 보수 후보자보다 진보 후보자에게 불리한 판정결과가 더 많고, 진보 언론사의 검증에서는 진보 후보자보다 보수 후보자에게 불리한 판정결과가 더 많다면, 이는 언론사가 정파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자에 더 유리한 발언을 편향적으로 선택하였을(혹은 반대하는 후보자에 불리한 발언을 편향적으로 선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팩트체크에서의 ‘검증오류’와 관련, 검증 대상이 되는 발언이 미래예측, 인과관계, 정치적 수사의 내용을 포함하는지를 각각 분석하였다(Uscinski & Butler, 2013). 즉 검증 대상 발언이 미래예측 내용을 담고 있는지(있음 = 1, 없음 = 0), 인과관계를 포함하는지(있음 = 1, 없음 = 0), 정치적 수사를 담고 있는지(있음 = 1, 없음 = 0) 등을 측정하였다.

### ④ 기술적 분석

19대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 현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사의 길이, 검증 대상, 검증 대상의 속성, 발언의 출처 등을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SNU 팩트체크와 제휴한 12개 언론사의 19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 174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언론사별로는 SBS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조선일보(31건) 중앙일보(20건) 한국일보(18건) KBS(18건) JTBC(14건) 매일경제(10건) 서울신문(9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판정결과로는 “사실 아님”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사실 아님”은 41건, 절반의 사실은 38건, 대체로 사실은 21건, 사실은 16건, 판단 유보는 11건 등이었다.

<표 1. 팩트체크 기사의 현황>

언론사	SBS	조선	중앙	한국	KBS	JTBC	매일경제	서울신문	YTN	동아일보	세계일보	MBN	
팩트체크	41	31	20	18	18	14	10	9	5	3	3	2	
최 다 검 증	발언자 기준	발언자 없음 (16)	홍준 표 (8)	문재인(8)	발언자 없음(5)	홍준표(6) 안철수(6)	홍준표 (7)	홍준표(3)	안철수(2) 유승민(2)	홍준표 (3)	없음(3)	홍준표(1) 문재인(1) 없음(1)	없음(2)
	진술문 주체	안철수 (13)	안철 수 (10)	홍준표(5) 문재인(5)	홍준표 (5)	안철수(7)	홍준표 (6)	홍준표(3) 안철수(3)	문재인(5)	홍준표 (2)	홍준표(1) 문재인(1) 안철수(1)	문재인(2)	홍준표(1) 문재인(1)
판 정 결 과	사실	2	7	1	3	0	0	2	1	0	0	0	0
	대체로 사실	5	2	2	2	3	0	2	2	0	1	1	1
	절반의 진실	3	9	10	3	1	4	2	3	1	1	1	0
	대체로 사실 아님	10	2	7	4	6	6	3	1	2	0	0	0
	사실 아님	19	9	0	5	8	3	0	2	1	0	0	0
	판단 유보	2	2	0	1	0	1	1	0	1	1	1	1

##### 1) 기술적 특징

국내 언론사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수행한 팩트체크 기사의 평균 길이는 2002자(최소 540자, 최대 4948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팩트체크 기사의 평균길이는 1914자, 방송사는 2105자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172)=1.57, p>.05$ . 언론사별로는 JTBC가 평균 2301자로 가장 길었으며, MBN이 988자로 가장 짧았다. 신문사에서는 매일경제가 2888자로 가장 길었으며, 중앙일보(2211자)와 서울신문(2182자)이 평균 2000자를 웃돌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언론사의 평균적인 기사 길이에 비해서는 다소 긴 것으로 볼 수 있다(김경모 외, 2018). 다만, 검증 기사에 활용된 취재원의 숫자는 평균 3.58개로 기사의 품질을 평가한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신문사의 검증에 사용된 전체 취재원 숫자는 평균 4.21개로 방송사의 평균 2.83개보다 더 많았다:  $t(172)=4.37, p<.001$ .

언론사가 검증한 대상은 정치인의 발언이 134건(77.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발언자 없는 소문이나 의혹 등이 33건(19.0%), 정당논평이 7건(4.0%) 등이었다. 또한 검증한 대상의 속성으로는 개인의 경력과 같은 개인적 속성이 100건(57.4%)이었으며, 공약 등과 같은 비개인적 속성은 70건(40.2%)이었다. 나머지 4건의 기사는 특정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 등을 검증하였다.

검증 대상이 된 발언의 출처를 밝힌 기사가 124건(71.3%)이며, 신문이나 TV의 방송이 86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도자료(16건), 캠페인자료집(9건), 소셜미디어(5건) 등이었다.

##### 2) 팩트체크 준칙의 준수

- (1) 팩트체크에서의 투명성 : 투명 취재원 사용, 익명 취재원 사용과 배경설명, 수정내용의 공개

국내 언론사의 팩트체크 수행에서 투명성 원칙은 투명 취재원의 사용(연구문제 1a), 익명 취재원 사용과 사용배경을 밝혔는지(연구문제 1b), 그리고 검증기사를 수정하였을 때는 수정내용을 공개하였는지(연구문제 1c) 등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에 사용된 투명 취재원의 숫자는 평균 2.69건이었다. 신문사와 방송사의 투명 취재원 숫자를 비교해보면 신문사가 평균 3.18건으로 방송사의 2.11건에 비해 더 많았다:  $t(172)=3.78, p < .001$ . 개별 언론사별로는 매일경제가 기사당 평균 4.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사 중에서는 KBS가 2.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BS가 1.63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국내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 숫자는 평균 0.89건이었으며 전체 174건 중 90건(51.7%)의 기사가 한 명 이상의 익명 취재원을 포함하였다. 신문사와 방송사의 익명 취재원 숫자를 비교하면, 신문사와 방송사가 각각 1.03건, 0.72건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72)=1.77, p > .05$ . 언론사별로는 매일경제의 기사당 익명 취재원 사용 숫자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이유나 배경을 밝힌 기사는 단 두 건에 머물렀다. 이들 기사에 등장한 익명 취재원 사용의 배경은 각각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환경공학과 교수”(매일경제, 2017년4월13일)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공식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한 여론조사 전문가”(중앙일보, 2017년4월18일)이었다.

<표 2. 팩트체크 기사의 투명성>

구분	언론사	투명 취재원	익명 취재원	전체 취재원
신문사	매일경제	4.70(2.16)	1.50(1.08)	6.20(3.04)
	중앙일보	3.75(2.63)	1.20(1.70)	4.95(2.68)
	조선일보	3.03(1.40)	1.03(1.07)	4.06(2.01)
	세계일보	3.00(1.00)	0.66(1.15)	3.66(2.08)
	한국일보	2.77(2.67)	0.83(0.85)	3.61(2.56)
	서울신문	2.22(0.97)	0.55(0.72)	2.77(0.83)
	동아일보	1.33(1.15)	1.33(1.15)	2.66(1.15)
	평균	3.18(2.11)	1.03(0.12)	4.21(2.44)
방송사	KBS	2.83(1.09)	0.61(0.91)	3.44(1.19)
	YTN	2.60(1.14)	0.00(0.00)	2.60(1.14)
	MBN	2.50(2.12)	1.00(0.00)	3.50(2.12)
	JTBC	2.35(1.78)	1.14(1.74)	3.50(2.17)
	SBS	1.63(1.42)	0.71(0.92)	2.34(1.63)
	평균	2.11(1.48)	0.72(1.09)	2.83(1.69)
전체		2.69(1.92)	0.89(1.14)	3.58(2.23)

※ 괄호안 숫자는 표준편차. 투명 취재원은 실명과 준실명 취재원을 포함한 것임.

국내 언론사들은 팩트체크 기사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된 내용을 독자에게 알리는 ‘수정 내용의 공개’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홈페이지에 “최초 등록 시간” 이외에 “수정 등록 시간”이 표시된 경우, 수정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수정이 없는 기사는 50건(28.7%)이었으며 수정한 기사는 124건(71.3%)이었다. 수정 시간대별로는 1) 24시간 이내 수정 73건, 2) 24시간 초과 48시간 이내 수정 4건, 3) 48시간 초과 1주일 이내 27건, 4) 1주일 초과 한 달 이내 14건, 그리고 5) 한 달 이상 6건 등이었다. 그러나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힌 기사는 이 중 4건이었다.

요약하면, 국내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에서 투명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팩트체크 기사에 포함된 투명 취재원 숫자는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일반 기사에서 사용된 숫자와 유사하였고, 전체 팩트체크 기사의 절반 이상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였으며,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에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팩트체크 기사를 수정한 경우에도, 어떠한 내용을 수정하였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 2) 불편부당성

이 연구에서는 언론의 팩트체크가 불편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사안을 검증했을 때 판정의 결과가 언론사별로 유사한지의 ‘판정결과의 일치도’(연구문제 2a)와 발언을 둘러싼 찬반의견을 모두 반영하였는지의 ‘이견의 수용’(연구문제 2b) 등 2개 항목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2개 이상의 언론사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검증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판정결과의 일치도’(연구문제 2a)의 경우 검증 결과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2개 이상의 언론사가 같은 대상에 대해 검증한 ‘교차검증’은 모두 22개 사실(fact)에 대한 55건의 기사였다. 이 가운데 10개 사실(22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판정이 완전히 일치하였다. 또한 나머지 10개 사실(29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판정결과가 한 단계 이내였다. 다만, 나머지 2개의 사실(4건의 기사)의 판정결과는 “사실아님”과 “사실”로 완전히 다르거나 “사실”과 “판단유보”로 엇갈렸다.

이 연구에서는 교차검증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2개 사실(4건의 기사)과 대체로 일치하는 10개 사실(29건의 기사) 등 총 12개 사실(33건의 기사)에 대한 판정 결과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향의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보았다. 그 이유는 언론사가 정파성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판정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더 불리하게 판정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보수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면서 보수 언론사는 “사실”로, 진보 언론사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언론사별로 판정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2개 사실(4건의 기사)과 대체로 일치한 10개 사실(29건의 기사) 등 12개 사실(33건)의 팩트체크 기사에서도 보수 언론이 보수 후보자에게 더 유리한 판정을 내리거나 진보 언론이 진보 후보자에게 더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2건 중 4건은 편향 가능성을 지지하였으나 2건은 지지하지 않았으며 6건은 어느 쪽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홍준표 후보자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조선일보, SBS, JTBC가 검증하였다. 이 발언이 거짓일수록 보수 후보자인 홍준표 후보자에게 불리하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SBS나 JTBC에 비해 더 거짓이라고 판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후보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놓았다. 한편, 문재인 후보자가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기본료는 필요없다”는 발언의 경우에는 거짓일수록 문재인 후보자에게 불리하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검증하였으며, 조선일보가 한국일보에 비해 더 거짓으로 판정하였기에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게 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분석의 대상이 된 기사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어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견의 수용’과 관련(연구문제 2b), 연구결과 분석 대상의 대부분인 166건(95.4%)에서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 8건의 기사의 경우에만 이견 취재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자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 수 있다”(중앙일보, 2017년3월14일자)는 발언을 검증한 기사의 경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전적으로 문재인 후보자의 캠프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홍준표 후보자의 “DJ,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70억 달러 줬다”(SBS, 2017년4월24일)는 발언을 검증한 기사의 경우, 홍 후보자의 발언 내용과는 다른 통계를 제시하는 통일부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홍 후보자가 어떠한 근거에서 70억 달러를 줬다고 주장하였는가에 대한 취재 내용이 빠져 있었다.

요약하면, 국내 언론사의 불편부당성을 1) 두 개 이상의 언론사가 동일한 대상을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에서의 판정결과의 일치도와 2) 이견의 수용 등 2개 항목으로 분석해본 결과 판정의 일치도는 대체로 높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다만, 판정결과가 “대체로 일치”한 경우,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일부 편향의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이는 검증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일반화할 수 없었다. 또한 대다수 기사가 이견을 수용하고 있어 발언자 측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교차검증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편향 가능성>

발언의 내용	거짓 판정결과가 불리한 후보	언론사	결과	편향 가능성
문재인 후보자,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기본료는 필요 없다"	문재인	한국일보	대체로 사실아님	조선일보, 불리하게 판정
		조선일보	사실아님	
홍준표 후보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에 넘어간 현물 등이 통일부 자료로 44억 달러다"	홍준표	한국일보	사실	한국일보, 불리하게 판정
		SBS	대체로 사실	
문재인 후보자, "개성공단 폐쇄로 12만 명 일자리 잃어"	문재인	JTBC	대체로 사실아님	JTBC, 유리하게 판정
		KBS	사실아님	
문재인 후보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합의된 것이다"	문재인	조선일보	사실아님	조선일보, 불리하게 판정
		한국일보	사실	
홍준표 후보자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	홍준표	JTBC	판단유보	KBS, 불리하게 판정
		KBS	사실아님	
홍준표 후보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학 등록금 자율화해서 등록금 113% 올랐다"	홍준표	조선일보	절반의사실	조선일보, 유리하게 판정
		중앙일보	대체로 사실아님	
안철수 후보자 "OECD의 공공 일자리 통계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위탁 받은 기업은 빠졌다"	안철수	한국일보	절반의사실	SBS, 불리하게 판정
		조선일보	절반의사실	
		SBS	대체로 사실아님	
홍준표 후보자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다"	홍준표	JTBC	대체로 사실아님	조선일보, 불리하게 판정
		SBS	대체로 사실아님	
		조선일보	사실아님	
안철수 후보자,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자제할 것	안철수	매일경제	대체로 사실아님	동아, 서울신문, 불리하게 판정
		한국일보	대체로 사실아님	
		동아일보	사실아님	
		서울신문	사실아님	
유승민 후보자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온다"	유승민	조선일보	대체로 사실아님	조선, 한국이 불리하게 판정
		한국일보	대체로 사실아님	
		매일경제	절반의사실	
		서울신문	절반의사실	
홍준표 후보자,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뉘었다"	홍준표	한국일보	사실아님	조선일보, 불리하게 판정
		조선일보	사실아님	
		KBS	사실아님	
		YTN	대체로 사실아님	
유승민 후보자, "홍준표 지사는 당선 돼도 재판 받으러 가야하고,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 상실된다"	유승민 (홍준표 후보에는 사실일 때 불리)	한국일보	대체로 사실아님	조선일보, 유리하게 판정
		조선일보	절반의사실	

■ 는 편향가능성을 지지하며 ■ 는 편향가능성을 지지하지 않음. 무색은 판단 보류.

3) 검증에서의 선택 편향과 오류 가능성(미래 예측, 인과적 관계, 정치적 수사)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기사를 대상으로 선택 편향(연구문제 3)과 검증오류 가능성(연구문제 4)을 분석하였다. 우선, 검증에서의 선택편향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발언자를 기준으로 언론사가 정파성에 따라 특정 후보자를 더 많이 검증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언론사별로 선택 편향의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전체 언론사의 홍준표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사는 약 45%(107건 중 48건)이었으나, SBS는 이보다 높은 75%(18건 중

13건), JTBC도 70%(10건 중 7건)이었다. 전체 언론사의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사는 약 23.4%였으나 중앙일보는 이보다 높은 50%(16건 중 8건)이었다. 안철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경우, KBS가 6건(37.5%)으로 언론사 전체 평균(18.7%)보다 높았다. 단, 이러한 분석은 팩트체크 기사가 5건 이하인 4개 언론사를 제외한 8개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표 4. 언론사별 대통령직 후보자 검증 빈도: 발언자 기준 >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합계
매일경제	3(37.5)	1(12.5%)	2(25.0%)	2(25.0%)	8(100.0%)
서울신문	1(16.7)	1(16.7%)	2(33.3%)	2(33.3%)	6(100.0%)
조선일보	8(38.1%)	5(23.8%)	2(9.5%)	6(28.6%)	21(100.0%)
중앙일보	6(37.5%)	8(50.0%)	2(12.5%)	0(0.0%)	16(100.0%)
한국일보	4(33.3%)	2(16.7%)	3(25.0%)	3(25.5%)	12(100.0%)
SBS	13(72.2%)	3(16.7%)	2(11.1%)	0(0.0%)	18(100.0%)
JTBC	7(70.0%)	1(10.0%)	1(10.0%)	1(10.0%)	10(100.0%)
KBS	6(37.5%)	4(25.0%)	6(37.5%)	0(0.0%)	16(100.0%)
합계	48 (44.9%)	25 (23.4%)	20 (18.7%)	14 (13.1%)	107 (100.0%)

또한 진술문의 주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언론사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표 5>에서 알 수 있듯, 홍준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JTBC(50%), 중앙일보(37.5%), 매일경제(37.5%) 등에서 다소 높았다.

< 표 5. 언론사별 대통령직 후보자 검증 빈도: 진술문 주체 기준 >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합계
매일경제	3(37.5%)	1(12.5%)	3(37.5%)	1(12.5%)	8(100.0%)
서울신문	0(0.0%)	5(55.6%)	2(22.2%)	2(22.2%)	9(100.0%)
조선일보	7(25.9%)	9(33.3%)	10(37.0%)	1(3.7%)	27(100.0%)
중앙일보	5(37.5%)	5(35.7%)	4(28.6%)	0(0.0%)	14(100.0%)
한국일보	4(26.7%)	5(33.3%)	4(26.7%)	2(13.3%)	15(100.0%)
SBS	5(18.5%)	9(33.3%)	13(48.1%)	0(0.0%)	27(100.0%)
JTBC	6(50.0%)	3(25.0%)	2(16.7%)	1(8.3%)	12(100.0%)
KBS	4(26.7%)	4(26.7%)	7(46.7%)	0(0.0%)	15(100.0%)
합계	34 (26.8%)	41 (32.3%)	45 (35.4%)	7 (5.5%)	127 (100.0%)

다음으로 언론사별 후보자 판정의 결과에서의 편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특정 언론사의 팩트체크에서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사실아님’이 유독 많다면, 이는 해당 언론사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발언자를 기준, 홍준표 후보자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의 판정 결과에서는 “절반의사실”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이라는 판정도 1건 있었다. 그러나 JTBC SBS KBS의 판정 결과에서는 “사실아님”이 각각 3건, 8건, 5건 등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실”은 한 건도 없었다. 반대로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사의 경우, JTBC와 SBS의 판정 결과에서는 “사실아님”이 한 건도 없었으나, 조선일보에서는 3건이었다(표 6 참조). 진술문의 주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7 참조). 홍준표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의 판정 결과에서는 “사실”과 “대체로사실”, “절반의사실” 등이 5건이었으나, JTBC에서는 “사실아님”, “대체로 사실아님”이 각각 1건 2건이었으며, “대체로 사실”, “사실”은 각각 0건이었다. 반대로 문재인 후보

자에 대한 검증기사에서는 조선일보의 판정 결과에서는 “사실아님”이 4건이었으나, JTBC에서는 “사실아님”이 0건이었다.

<표 6. 발언자 기준으로 한 검증결과>

판정결과	홍준표 후보자				문재인 후보자			
	조선일보	JTBC	SBS	KBS	조선일보	JTBC	SBS	KBS
사실아님	3	<b>3</b>	8	5	<b>3</b>	<b>0</b>	<b>0</b>	2
대체로사실아님	0	<b>2</b>	3	0	0	1	1	1
절반의사실	<b>4</b>	1	0	0	1	0	1	0
대체로 사실	<b>0</b>	0	2	1	0	0	1	1
사실	<b>1</b>	0	0	0	1	0	0	0

<표 7. 진술문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검증결과>

판정 결과	홍준표 후보자				문재인 후보자			
	조선일보	JTBC	SBS	KBS	조선일보	JTBC	SBS	KBS
사실아님	2	<b>1</b>	1	3	<b>4</b>	<b>0</b>	3	2
대체로사실아님	0	<b>2</b>	2	0	1	2	3	1
절반의사실	<b>2</b>	2	0	0	1	1	2	0
대체로 사실	<b>1</b>	0	2	1	1	0	0	1
사실	<b>2</b>	0	0	0	2	0	0	0

검증의 오류와 관련, 국내 팩트체크 기사 중 미래예측이나 인과적 관계, 정치적 수사 등을 포함한 기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연구문제 4). 그 결과 19대 대선의 팩트체크 기사 중 인과관계를 포함한 기사는 32건(18.4%), 미래예측은 18건(10.3%), 정치적 수사는 44건(25.2%)이었다. 예를 들어, “휴대폰 기본료 폐지” 문재인 공약 실현될까(한국일보 2017년4월12일자)라는 팩트체크 기사는 미래예측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기사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통신업계의 입장을 통해 전망하였다. 또한 ‘홍준표,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해주고, 실업률 3.4%로 낮췄다”’(조선일보, 5월3일자)라는 기사는 노동의 유연성과 실업률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한 홍 후보자의 발언을 팩트체크하였다.

요약하면,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에서 선택편향의 가능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인과관계 미래 예측 정치적 수사 등을 포함한 팩트체크 기사는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 5. 논의

미국에서 시작된 정치 분야의 팩트체크(Fact-Check)가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Dobbs, 2012; Marietta et al., 2015). 국내에서도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많은 국내 언론사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도입하여 후보자 발언을 검증,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대선 이후에도 각 언론사는 정치인과 같은 유력인사의 발언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팩트체크하고 있다. 이처럼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언론이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팩트체크의 준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의 준칙(Code of Principles)을 분석의 틀로 삼아 국내 팩트체크 기사를 분석하였다.

IFCN은 1) 비정과정과 공정성, 2) 취재원 투명성, 3) 재정과 조직에 관한 투명성, 4) 검증방법의 투명성, 그리고 5)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 등을 팩트체크의 5대 준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투명성과 불편부당성(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팩트체크의 원칙으로 판단하였으며 국내 언론이 이를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기하는 1) 검증 대상 선택에서의 편향(selection bias)과 2) 검증에서의 오류- 미래예측, 인과관계- 가능성을 국내 팩트체크 기사가 어느 정도 포함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대 대선에서 국내 주요 12개 언론사가 SNU 팩트체크 센터와 제휴해 후보자들의 발언 내용을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 174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검증의 투명성은 취재원 사용과 수정내용의 공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연구문제 1). 취재원 사용의 경우에는 투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였을 때 그 이유를 밝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팩트체크 기사의 투명 취재원 숫자는 평균 2.69건, 익명 취재원은 평균 0.89건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일반 기사에서의 투명 취재원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모 외, 2018). 또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에도 왜 익명 취재원을 사용했는지, 익명 취재원이 해당 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기사는 2건이었다. 팩트체크 기사를 수정하였을 때에도 수정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즉, 174건의 기사 중 124건이 수정되었으나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힌 기사는 4건이었다. 선행연구는 국내 언론의 취재원 투명성이 해외 언론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밝힌 바 있으며(김경모 외, 2018; 박재영·이완수, 2007; 이완수·박재영, 2013), 현재 연구의 결과는 한국 언론의 이러한 관행이 팩트체크 기사 작성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FCN은 투명성이 독자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자신들이 왜 특정 대상을 검증하는지, 그리고 사실을 검증할 때에는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누구를 통하였는지 등을 밝히면 독자들도 자신들과 같은 판정 결과에 이를 것이고 이를 통해 검증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기관들은 취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언론이 그동안 비판받아온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과도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언론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 외부에 알리는 데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Graves, 2017). 이러한 해외의 사례는 국내 팩트체크 기사에서도 비리를 최초로 고발하는 등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보다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두 번째 원칙인 불편부당성 혹은 비(非)정과정은 선행연구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언론사가 동일한 사실을 검증한 ‘교차검증’에서 판정결과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각각 보수 후보자의 특정 발언을 검증한 뒤 동일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불편부당하지만, 보수 언론은 ‘사실’, 진보 언론은 ‘사실아님’으로 판정했다면 이는 불편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교차검증 기사는 22개 사실을 검증한 5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0개 사실(22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판정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또한 2개 사실(4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판정결과가 “완전 불일치”하였으며 나머지 10개 사실(29건의 기사)의 경우 검증의 결과가 ‘사실’ 혹은 ‘대체로 사실’ 등과 같이 “대체로 일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사별로 검증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10개 사실(29건의 기사)과 “완전 불일치”한 2개 사실(4건의 기사)을 대상으로 언론사의 정과성에 따른 판정 결과의 편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동일한 사실에 대해 보수 언론이 보수 후보자에게 더 유리한 판정을 내리거나 (“사실”이 “대체로 사실”보다 유리) 보수 언론이 진보 후보자에게 더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면(“사실 아님”이 “대체로 사실 아님”보다 불리) 이 역시 정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과 총 12개의 사실 중 4건에서만 편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언 내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는지를 의미하는 “이견의 수용”의 경우 전체 기사의 약 95%가 이견을 수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기관이 검증 대상을 선택할 때 편향이 있는지와 팩트체크 대상으로 미래예측, 인과관계 등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택편향을 살펴보기 위해 언론사의 정과성에 따라 특정 후보를 더 검증하는지(예를 들어,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가 진보 진영의 문재인 후보자를 더 빈번



하게 검증하는 등)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즉, SBS와 JTBC에서 다른 언론사에 비해 보수 진영의 홍준표 후보자를 더 빈번하게 검증하였으나 대체적으로는 언론사의 정파적 성향에 따른 검증대상의 선택에서 체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특정 언론사가 자신이 정파와 반대되는 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미약하나마 편향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홍준표 후보자의 발언을 총 8개 검증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실아님’이 3건, 절반의사실은 4건, 사실은 1건이었으나 다른 언론사의 경우에는 사실이 1건도 없었고, ‘절반의사실’의 판정 결과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발언문의 내용이 발언 주체에게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는 진술문은 “사실아님”으로 판정될 경우 문재인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자는 통신료 인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진술문은 “사실아님”으로 판정될 경우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발언내용의 유/불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언론사의 판정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미래예측을 담은 발언을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는 18건(10.3%), 인과관계를 포함한 팩트체크 기사는 32건(18.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예측이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일부 학자들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공약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공약을 현재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평가하는 것이 비록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과관계의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 비록 사회적 현상을 분석할 때는 특정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 등을 검증할 때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을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 최선을 원인을 찾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미래예측이나 인과관계를 다룬 진술문을 검증할 때의 한계점과 유의점 등을 인식하고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 관행에서 선택편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을, 그리고 검증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기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논의가 더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지닌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 대상인 기사가 174건으로 적어 언론사의 정파성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19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검증기사를 제공한 SBS의 경우에도 41건에 불과하였으며, 동아일보 YTN 등 4개 언론사는 5건 이하에 불과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국내 최초의 팩트체크 센터인 서울대 팩트체크와 제휴한 언론사 12곳에서 실시한 모든 팩트체크 기사를 연구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밝혀둔다. 향후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팩트체크 기사를 수집한 뒤 언론사의 정파성에 따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이 강조하는 투명성이란 이 연구에서 분석한 투명 취재원의 사용과 수정내용의 공개 외에도 누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는지를 밝힐 것, 그리고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등도 포함된다. 다만, 미국 팩트체크 기관은 특정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재정 지원자가 중요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주도하고 있어 이러한 준칙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팩트체크의 결과물인 기사로는 분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에는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언론사의 팩트체크 담당자를 참여 관찰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 연구의 대상이 된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는 도입 초기여서 팩트체크의 원칙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팩트체크 기사와 해외의 팩트체크 기사를 직접 비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팩트체크 기사를 직접 분석해 그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19대 대선을 계기로 본격화한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가 세계의 주요 팩트체크 기관들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국제 팩트체크 준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팩트체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모·박재영·배정근·이나연·이재경(2018). <기사의 품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선호·백영민(2018). 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 팩트체크 뉴스 판정결과와 지지후보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5권 1호, 161-194.
- 목은영·이준웅(2014). 정보원 다양성, 이해 당사자 견해 반영, 관점 균형성이 뉴스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8권 4호, 428-456.
- 박성호(2018). 공영방송 저널리즘을 위한 불편부당성 개념의 재구성: BBC의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5권 1호, 119-160.
- 박성호·윤석민(2016). 방송 범조뉴스의 품질 연구: 정확성, 심층성,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0권 4호, 83-120.
- 박아란·이나연·정은령(2018).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재영(2006). 뉴스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1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한국 저널리즘과 뉴스미디어에 대한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재영·이완수(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백영민·김선호(2017). 팩트체크 뉴스 노출, 영향력 인식, 공유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61권 6호, 117-146.
- 손영준(2011). TV뉴스 공정성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시민은 동등 비중의 원칙을 더 원한다.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122-158.
- 염정윤·정세훈(2018).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41-80.
- 이건호·정완규(2009). 취재 영역 및 보도 형태별 뉴스 심층성 연구: 한·미 신문 1면 기사에 나타난 투명 취재원, 복합 관점, 이해 당사자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21권, 5-48.
- 이완수·박재영(2013). 방송뉴스의 언어와 표현: 뉴스언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권 1호, 5-45.
- 이재경(2006).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관행 비교: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언론과 사회>, 14권 4호, 37-69.
- 이재경·김진미(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1-307.
- 이준웅·김경모(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통신연구>, 67호, 9-44.
- 이창근(2004).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 기준의 역사와 성격에 대하여. <방송문화연구>, 16권 2호, 199-227.
- 정은령(2017). 팩트체킹 뉴스 의미와 한계. <관훈저널>, 143(2017년 여름), 19-25.
- 정은령(2018, 5월). <팩트체크, 한국적 모델의 정립을 위한 성찰 및 탐색>.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기획 분과. 부산: 경성대학교.
- 최순욱·윤석민(2017). 협업형 사실검증 서비스의 의의와 과제: <SNU 팩트체크>의 사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권 2호, 173-205.
- Amazeen. M. A. (2012). The Dole "Godless Americans" advert: Representations of the unfaithful, disloyal villains. *Social Semiotics*, 22(3), 1-16.
- Amazeen. M. A. (2013). Making a difference? A critical assessment of fact-checking in 2012, *New America Foundation*. 1-40.

- Amazeen, M. A. (2015a). Developing an Ad-Reporting Typology: A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newspaper and fact-checker coverage of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3), 617-641.
- Amazeen, M. A. (2015b). Revisiting the epistemology of fact-checking. *Critical Review*. *27*(1), 1-22.
- Amazeen, M. A. (2016). Checking the fact-checkers in 2008: Predicting political ad scrutiny and assessing consistency.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15*, 433-464.
- Chalaby, J. K. (1996). Journalism as an Anglo-American Invention: A comparison of the development of French and Anglo-American journalism. 1830 - 1920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1*(3), 303-326.
- Coddington, M, Molyneux, L., & Lawrence, R. G. (2014). Fact-checking the campaign: How political reporters use Twitter to set the record straight (or no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9*(4), 391-409.
- Cunningham, B. (2003). Re-thinking objectivity. *Columbia Journalism Review*. *42*(2), 24-32.
- Dobbs, M. (2012).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New American Foundation.
- Fedler, F., Bender, J. R., Davenport, L., & Drager, M., W.(2005). Reporting for the med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 Gottfried, J. A., Hardy, B. W., Winneg, K. M., & Jamieson, K. H. (2013). Did fact checking matter in the 2012 Presidential campaign? *American Behavior Scientist*, *57*(11), 1558-1567.
- Graves, L. (2016). *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aves, L. (2017). Anatomy of a fact checking: Objective practice and the contested epistemology of fact checking.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10*, 518-537.
- Graves, L., Nyhan, B., & Reifler, J. (2015, April, 22). The diffusion of fact-checking: Understanding the growth of a journalistic innovation. American Press Institute.
- Graves, L., Nyhan, B., & Reifler, J. (2016). Understanding innovations in journalistic practice: A field experiment examining motivations for fact-checking. *Journal of Communication*, *66*, 102-138.
- Poynter(2018).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Code of Principles Report 2018*. [https://ifcncodeofprinciples.poynter.org/storage/docs/PUBLIC\\_VERSION-CODE\\_OF\\_PRINCIPLES\\_REPORT\\_YEAR\\_1\\_REV\\_AM.pdf?v=1538242914](https://ifcncodeofprinciples.poynter.org/storage/docs/PUBLIC_VERSION-CODE_OF_PRINCIPLES_REPORT_YEAR_1_REV_AM.pdf?v=1538242914)
- Kovach, B., & Rosens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3rd ed.).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sup>nd</sup> ed.). Thousand Oaks, CA: Sage.
- Lowrey, W. (2017).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News Fact-checking Sites: Institutional logics and population ecology. *Journalism Studies*, *18*(3), p. 376-394.
- Marietta, M., Barker, D. C., & Bowser, T. (2015). Fact-checking polarized politics: Does the fact-check industry provide consistent guidance on disputed realities? *The Furum*, *13*(4), 577-596. doi: 10.1515/for-2015-0040.
- Nyhan, B. & Reifler, J. (2015). The effects of fact-checking on Elites: A field experiment on U.S.

- state legislato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28-640.
- Ostermeier, E. (2011). Selection bias? PolitiFact rates Republican statements as false at three times the rate of Democrats. Retrieved from <http://editions.lib.umn.edu/smartpolitics/2011/02/10/selection-bias-politifact-rate/>.
- Pingree, R. J., Brossard, D., & McLeod, D. M. (2014). Effects of journalistic adjudication on factual beliefs, news evaluations, information seeking, and epistemic political efficacy.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7(5), 615 - 638.
- Rich, Carole. (2005). *Writing and Reporting News*. 4<sup>th</sup> edition. Belmont: Wadsworth.
- Schudson, M. (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2), 149-170.
- Shin, J. & Thorson, K. (2017). Partisan selective sharing: The biased diffusion of fact-checking messages on social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67(2), 233 - 255.
- Streckfuss, R. (1990). Objectivity in journalism: A search and a reassessment. *Journalism Quarterly*, 67(4), 973-983.
- Sullivan, M. 2012. "In real time, and beforehand, checking facts on the Presidential debate." The New York Times, October 3. <http://publiceditor.blogs.times.com/2012/10/03/in-realtime-and-beforehand-checking-facts-on-the-presidential-debate/>.
- Tankard, J. (1976). Reporting and scientific method. In M. McCombs, D. J. Weaver & D. Grey (Eds.) *Handbook of reporting methods*(pp. 42-77). Boston, M. A.: Houghton Mifflin.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Uscinski, J. E., & Butler, R. W. (2013). The epistemology of fact checking. *Critical Review*, 25(2), 162-180.

## **Abstract**

A Content Analysis of Fact-Checking of Korean News Organization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Based on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Lee, Na Ye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o what extent Korean news organizations followed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as part of their routine practices during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To that end,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of the fact-checking news stories provided by 12 major news organizations that are strategically affiliated with the "SNU Fact-Check Center," Korea's first fact-check organization, loca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outh Korea. The two main fact-checking principles of IFCN are - transparency and impartiality.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the Korean news media were found to fall short transparency, for example, in the frequent use of anonymous sources. By contrast, the news media were found to do well in upholding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Adherence to the principal of impartiality is measured in terms of whether more than two news organizations that fact-check the same issue arrive at the same conclusion- true, mostly true, false. In addition, results showed that selection bias, which is one of the criticisms directed toward Fact-Checkers, was not found. These suggest the direction that fact-checking practices by Korean news organization need go to remedy their shortcomings.

Keywords: Fact-Check, Transparency, Impartiality, Selection bias